

2012. 2. 27. Vol. 9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농어촌 토지이용 실태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

거시경제 동향

2012년 2월 소비자동향지수

기획 정보

새출발 앞둔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추진 동향
일본 농림수산정책연구소 2012 연구과제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2 농림수산물분야 재정지원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 분석실

주요 농정 이슈_1

농어촌 토지이용 실태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 본 자료는 2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어촌 토지이용 실태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조사개요

- (조사목적) 농어촌 경관 보전·관리, 농어촌 토지이용 실태, 농·산지 보전 필요성 등에 대한 국민 의식 파악
- (조사대상)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 (조사시기) 2012. 1. 2~10
- (조사기관) (주)인포마스터
- (조사방법) 전화 설문

□ 주요내용

- 전체 조사대상자의 61.4%가 우리나라 농어촌의 경관이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86.3%가 농어촌 경관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응답
 - 하지만 농어촌 경관을 구성하는 농경지·마을·자연 경관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응답은 24~27.4%로 낮게 나타남.
 - ※ 잘 관리되고 있다 : (농경지경관) 27.4%, (마을경관) 26.2%, (자연경관) 24.0%
- 농어촌 지역의 난개발 실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3%가 심각하다고 인식
 - ※ (매우) 심각하다 63.3% > 보통이다 28.1% > (전혀) 문제없다 7.6%
 - 읍·면지역 거주자 보다 도시지역 거주자가, 학력과 소득이 높아질수록 농어촌 난개발이 심각하다고 인식
 - 농어촌 지역의 경관을 훼손하는 주된 시설로 공장·창고와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을 선택
 - ※ 공장/창고(21.4%) >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20.1%) > 대형 간판 등

- 각종 광고물(14.9%) > 축사(13.6%) > 송전탑 및 전기선(12.4%) 등의 순
- 전체 응답자의 66.8%가 농어촌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이용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 ※ (매우)필요하다 66.8% > 보통이다 24.0% > (전혀)필요하지 않다 8.1%
 - 대도시 거주자, 고학력자, 농어촌 지역 방문 횟수가 많은 응답자는 토지이용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
 - 읍·면 거주자, 농림어업 종사자는 토지이용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
- 전체 응답자의 88%가 식량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농지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90.8%가 쾌적한 환경과 산림보호를 위해 산지보전이 필요하다고 응답
 - ※ 농지 : (매우)필요하다 88.0% > 보통이다 9.1% > (전혀)필요하지 않다 2.8%
 - ※ 산지 : (매우)필요하다 90.8% > 보통이다 6.9% > (전혀)필요하지 않다 2.3%
 - 농·산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도시 거주자가 읍·면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
-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강화와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둘 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규제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 둘 다 똑같이 중요함(63.4%) > 규제강화(22.3%) > 규제완화(13.0%)
 - 다른 직업군과 달리 농림어업 종사자군은 규제강화 보다 규제 완화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전체 응답자의 25.7%가 우리 농어촌의 경관을 유럽의 선진국과 같이 아름답게 조성하는데 필요한 세금을 추가적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
 - 지역별로 도시지역 거주자가 읍·면지역 거주자에 비해 추가 지불 의사뿐만 아니라 지불의사금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추가 지불 의사 : 대도시(27.4%), 중소도시(26.7%), 읍·면(22.6%)
 - ※ 지불의사금액 : 대도시(29,772원), 중소도시(21,027원), 읍·면(14,105원)

주요 농정 이슈_2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

※ 본 자료는 2월 16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피부에 외닿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원칙

- (새로운 주체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 협동조합형 패커(Packer) 육성, 도축장 구조조정, 지역별 거점도축장 육성, 사이버거래 확대 등
- (유통경로 간 경쟁촉진) 대도시 중심 정육점식당, 정육점 프랜차이즈화, 직거래 장터 확대
- (축산물 유통 투명성 강화) 이력제를 통한 유통물량 파악, 가공단계 이후 축산물 유통맵 구축

□ 개선 방안

○ 협동조합형 패커(Packer) 육성

- 농협 「안심축산」을 패커로 육성하여 생산·유통·판매까지 일관하는 계열화 시스템을 구축

※ 시장점유율(안심한우) : ('10) 50천마리(8.3%) → ('12) 120(20) → ('15) 350(50)

(안심한돈) : ('10) 80천마리(0.5%) → ('12) 1,000(7) → ('15) 2,500(18)

※ 패커 효과 : 유통단계 축소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 6.5% 인하 가능

- 농가는 생산·출하, 지역축협은 수집·공급, 안심축산은 가공·유통·판매를 담당하는 구조로 역할 분담

○ 온라인 거래 등 신(新) 유통채널 적극 활용

- 금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정육점과 쇠고기 품질공정 지정업체(축산물품질평가원 지정 16개 업체)간 전용 사이버몰(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소) 운영
- 이를 통해 참여업체의 부위별 공급내역을 전산 등록하여 원산지 표시

및 등급판정 내용 등을 제공·관리

○ 부분육 유통 및 육가공산업 활성화

- 부분육 유통을 통해 지육중심 유통에 따른 위생·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고 유통비용을 절감
- '15년에는 거점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의 포장 유통을 의무화하고, 공판장의 부분육 상장 확대 및 가공시설을 증설

※ 농협의 안심축산 부천공판장 부분육 경매 개시 : '11.12.16

- 수급불균형 해소 및 비선호부위 유통확대를 위해 제품·기술개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육가공산업 발전대책 마련(상반기)

※ 선진국 사례 : 독일의 프라이셔라이, 메쯔거라이, 영국의 델리카슨 등

○ 대도시 중심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한 거품 제거

- '17년까지 농협이 운영하는 정육점식당 100개소 추가 개설 및 일반 정육점을 '15년까지 1,000개 프랜차이즈(안심축산물 전문점)하여 판매망을 구축
- 금년 4월까지 특·광역시 20개소 내외의 직거래 장터 개설

○ 축산물 유통경로별 공급량 파악

- 이력제를 확대(금년중 법개정)하여 식육포장처리 파악물량을 현재 50% 수준에서 '15년까지 80%로 확대

※ 전산신고 의무대상 확대 : (현재)식육포장처리업(종업원 5인 이상) → (확대)음식점, 급식업소, 통신판매업소, 정육점으로 납품하는 자

- 장기적으로는 현재 도축단계까지만 파악하고 있는 유통경로 및 물량을 가공단계 이후까지도 가능하도록 축산물 유통맵 구축

○ 사료원료 확보를 통한 생산비 절감

- 수입물량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aT Grain과의 연계방안, 해외농업개발 확대 및 국제곡물가격 변동에 연동한 사료 가격 책정 등의 내용을 담은 '사료가격 안정대책'을 4월 중 마련
- 이와 함께 할당관세 적용 등 사료가격 안정지원 지속 추진 및 조사료 생산특구 지정 등을 통해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

※ 본 자료는 2월 24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2월 소비자동향지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소비자심리지수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2월중 100으로 전월대비 2p 상승

<구성지수의 기여도>

구분	11.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1월	2월
소비자심리지수 ¹⁾	102	102	99	99	100	103	99	98	100
(전기 대비 지수차) ²⁾	△1.9	0.0	△2.8	0.0	0.8	2.7	△3.4	△1.1	2.5
구 성									
현재생활형편	△0.2	△0.2	0.0	△0.5	0.5	0.2	△0.3	△0.3	0.5
생활형편전망	△0.5	△0.2	△0.2	0.0	0.2	0.6	△0.7	△0.2	0.7
지수의									
가계수입전망	△0.3	0.3	△0.5	0.3	0.0	0.5	△0.8	0.0	0.3
기여도									
소비지출전망	△0.2	0.0	△0.7	0.4	0.0	0.2	△0.5	△0.2	0.5
(p)									
현재경기판단	△0.3	△0.1	△0.5	△0.3	0.1	0.6	△0.5	△0.2	0.2
향후경기전망	△0.4	0.2	△0.9	0.1	0.0	0.6	△0.6	△0.2	0.3

주 1) 소비자심리지수는 개별지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 한 후 단순 평균하여 산출
2) 전기와 지수 차이를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시

□ 가계의 소비심리

- 현재생활형편CSI¹⁾와 생활형편전망CSI는 전월대비 3p, 4p 상승
- 가계수입전망CSI 및 소비지출전망CSI는 전월대비 1p, 2p 상승

<생활형편, 가계수입 및 소비지출전망CSI 추이>

구분	11.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1월(A)	2월(B)	(B-A)
현재생활형편CSI	87	86	86	83	86	87	85	83	86	(+3)
생활형편전망CSI	93	92	91	91	92	95	91	90	94	(+4)
가계수입전망CSI	96	97	95	96	96	98	95	95	96	(+1)
소비지출전망CSI	109	109	106	108	108	109	107	106	108	(+2)

1) 소비자태도지수(CSI: Consumer Sentiment Index): 장래의 소비지출 계획이나 경기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지수로 환산해 나타낸 지표

□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 현재경기판단CSI, 향후경기전망CSI는 각각 전월 대비 3p, 4p 상승
- 취업기회전망CSI는 전월대비 5p 상승
- 물가수준전망CSI 및 금리수준전망CSI는 전월대비 각각 2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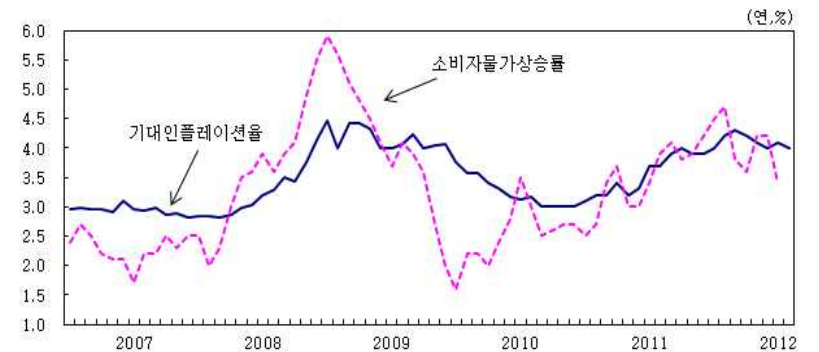
<경기, 취업기회, 물가 및 금리수준전망CSI 추이>

구분	11.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1월(A)	2월(B)	(B-A)
현재경기판단CSI	77	76	68	64	66	75	68	65	68	(+3)
향후경기전망CSI	86	88	77	78	78	86	78	76	80	(+4)
취업기회전망CSI	91	92	88	96	90	91	82	83	88	(+5)
물가수준전망CSI	147	149	151	144	145	140	146	144	142	(△2)
금리수준전망CSI	132	133	128	126	123	119	118	117	115	(△2)

□ 기대인플레이션

-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4.0%으로 전월대비 0.1%p 하락
- 구간별로는 향후 물가가 2.0%~4.0% 범위에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소비자 비중이 42.1%로 지난달에 비해 2.1%p 증가한 반면 4.0%를 초과하여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소비자 비중은 53.9%로 2.2%p 감소

<기대인플레이션을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소비자심리지수의 개념〉

-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 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
 - 6개 개별지수를 표준화 구간(현재 '99.1/4분기~'08.2/4분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이를 합성한 종합적인 소비자 심리지표임
- 개별지수가 100보다 높은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100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반대를 의미
 -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99.1/4~'08.2/4)평균보다 **낙관적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나타냄.

기획 정보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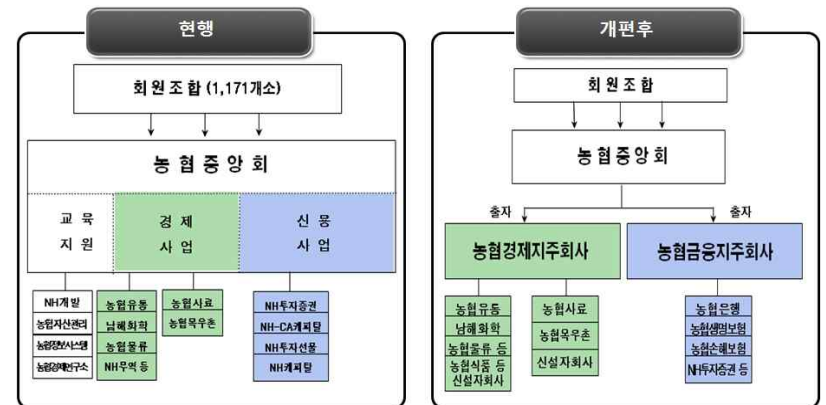
새출발 앞둔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추진 동향

※ 본 자료는 농업전문지 및 일간지 동향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 참조

□ 사업구조 개편 목적 및 조직구조

- 사업부문별 전문성·책임성 및 경쟁력 제고하고, 농협을 '판매농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추진
-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2011.3.11)로 현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2012.3.2일 시행)

<사업분리 방식>



주: 1) 2015년 3월, 중앙회의 판매·유통 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
 2) 2017년 3월, 중앙회의 모든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1.3)

- 농협중앙회: 조합 및 농업인 교육·지도 등에 전념, 경제 및 금융지주회사 소유, 지주회사 지도 및 감독
- 농협경제지주회사: 농축산물 판매·가공·유통 등 경제사업 전담, 경제 전문인력과 조직 보유, 자본 배정
- 농협금융지주회사: 협동조합 직접 사업의 단점 보완, 시장 경쟁 가능한 체제로 전환

□ '농협법 개정' 기대요약

- 중앙회가 “회원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탄생
- 농축산물 유통·판매 사업은 대형유통업체, 식품회사 등 대량 수요처와 거래, 수입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사업적 틀 마련
- 농협의 신용사업은 농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시중 금융기관과 경쟁 가능한 조직형태로 전환

□ 사업구조 개편 추진 과정

2009.12	2011.3.11	2011.3.31	2011.9.21	2011.12.31	2012.2.21	2012.3.2
농협법 개정안 국회 제출	농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협법 개정안 공포	정부의 농협 사업구조개편 방안 국회 보고	농협 사업구조 개편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협중앙회 대의원 회의서 신용·경제분리 방안 확정	법인 등기 및 출범

□ 시원규모

구 분	농협 요구안 (11.7.29)	정부안	비 고
필요자본	27.42조	25.42조	
- 보유자본(-)	15.16조	15.16조	*자산실사 후 보유자본
- 부족자본	12.26조	10.26조	
• 자체조달(-)	6.26조	6.26조	*이익잉여금 0.93, 출자 등 0.56, 차입 4.69, 회계조정 0.08
• 정부지원	6.00조	4.00→5.00조	*1조원 증액한 5조원 지원*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1.9)

※ 2012년 예산 심의 과정 등에서 정부지원액을 5조원으로 조정, 예산에 반영

□ 사업구조 개편 주요 쟁점

- 정부-농협 간의 입장차로 정부의 현물출자 2조 원에 대한 지원방식이 담보 상태로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었지만 **최근 정부가 농협측에 1조 원 (현물출자)+4조 원(이자 보전) 방안 제시**

- 농협중앙회 2.20 이사회, 2.21 대의원회를 통해 **정부 제안 수용하면서 1조 원 현물출자는 금융지주회사로 지원되고 의결권 없는 우선 배당주를 받게 됨.**

<농협 VS 정부 입장차>

농 협	구 분	정 부
• 산은 기은 등 현금화 가능한 금융주식	출자 현물	• 도로공사 지분, 비상장 공기업 주식 등 다양한 현물
• 현물 2조 원+이자보전 3조 원 →(현물 1+이자보전 4) • 정부 수정안 수용	현물출자 규모	• 현물 1조원+이자보전 4조 원 수정안 제시
•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 • 정부 수정안 수용	출자 처	• 농협금융지주
• 의결권 없는 저배당 우선주	출자지분 형태	• 의결권 있는 보통주 →의결권 없는 저배당 우선주
• 농민이 주인인 토종은행 정체성 확보 • 정부가 금융지주로 직접 출자하면 자율성 침해→농협법 취지 훼손	쟁점 논리	• 중앙회에 출자하면 신·경분리 취지 퇴색 • 농민 지분이 90%인데 자율성 침해 어불성설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22), 동아일보(2.20), 농협중앙회, 기획재정부, 헤럴드 경제(2.14), 서울신문(2.8)

- 그러나 현물출자 1조 원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유동성 높은 주식 요구로 **유동성 높은 주식출자 지원 관련 합의는 미지수**

□ 새 농업 출범... 양우 추진 개선 방안 모색

- 농협중앙회는 농협법 개정의 주목적이었던 경제사업 활성화보다는 금융 조직 및 중앙회의 권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는 조직개편 등이 추진되어 당초 '농협법'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음.
- 판매농협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와 금융지주의 연착륙 중요**
- 새로운 체제의 농협중앙회의 출범은 '협동조합'의 역할을 찾지는 취지인 만큼 **농협의 근간인 지역 조합의 개혁도 큰 과제**

※ 본 자료는 2월 농진청 '해외포커스' 에서 발표한 「2012 일본 농림수산업정책 연구과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일본 농림수산업정책연구소의 기본목표

- 농림수산업정책연구소는 농림수산업 정책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평가, 환경경제성 평가, 식량수급 예측, 푸드시스템, 농촌사회·산업·경제구조분석 세계 농업정책 조사 등 일본 농업정책 관련 연구수행 정보수집 및 분석을 행정부에 제공하는 것을 기본 목표

□ 2012년 농림수산업 정책연구의 4대 기본방향

- (지진피해 대책 특별프로젝트 연구) 대지진에 따른 피해복구 대책 등의 관점에서 각종 지역농업관련 연구 추진
- (농업생산 체질 강화를 위한 연구) 농업구조 변동과 지역성을 고려한 농업생산 주체의 입체적 파악 및 국외 소득 보상제도에 대한 연구 수행
- (6차산업화 등 농업·농촌의 활성화 연구) 소비자 수요변화에 대응한 식품 공급체계 개편, 농촌지역 재생 및 외국의 지리적 표시제도에 대한 적용실태 분석
- (에너지 관련 정책 연구) 일본 농업분야의 지구온난화 대책의 평가 기법 개발, 바이오매스 에너지 도입 및 활용 등에 관한 연구

□ 지진피해 대책 특별프로젝트 연구

1. 지역농업의 재편

-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피해지역의 복구 이후 지역농업 재편, 기간적 종사자 확보를 위한 과제 정리

2.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 대지진에 따른 피해지역의 지역자원,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와 이를 위한 지역 외부와의 협동·연계를 위한 과제 정리

3. 6차산업화의 추진

- 6차산업화 선진사례와 타산업에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을 비교 분석하여 대지진에 따른 피해지역을 비롯한 지역특성을 살린 6차산업화 추진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4. 바이오매스 에너지 등의 도입

- 피해 지역에서의 바이오매스 등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중심으로 지역 내 경제순환이나 에너지 자립 가능성 평가 수법을 개발 및 평가

□ 농업생산 체질 강화를 위한 연구

1. 오벨 소득보상 제도에서의 지역농업·농업생산 주체에 관한 연구

- 호별소득제도 하에서의 농업구조 변화와 그에 대응한 농업생산 주체의 동향에 대해 2010년 농업센서스 결과 등을 사용한 거시적 분석
- 지역의 입지조건, 주요경영 작목, 농업생산 주체의 분석관계 등에 기초하여 농업생산 주체의 현황과 금후 예상되는 구조변화를 파악

2. 국외 가격·소득보상 제도 등에 관한 분석

- EU의 차기 공동농업정책(CAP) 미국의 차기 농업법의 검토 등 주요국의 농업정책개혁 방향의 조사·분석
- EU, 미국의 직접지불에 관한 지불대상의 논의동향, EU 직접지불 실시 비용에 대해 조사·분석
 - 또한 한국에 대해서는 FTA 등에 따라 한국정부가 지향하는 농업구조 조정의 조사·분석

□ 6차산업과 등 농업·농촌의 활성화

1. 소비자 수요변화에 대응한 식품 공급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 공급 체인의 주요 품목별·단계별 분석

- 주요농산물(보리, 채소, 대두, 소고기 등)에 대한 신선 농식품 소비, 가공품 소비, 외식을 포함한 소비자 수요의 동향 파악 후 공급 체인 전체에서 소비자 수요변화 검토 및 요인 분석

○ 생산·가공·유통의 통합적 추진이 지역에 미치는 요과에 관한 분석

- 생산·가공·유통의 통합적 추진 농업인과 상공업자 등의 소득증가, 지역 고용확대 등 효과 분석

2. 다양한 주체와 연계를 통한 농촌 지역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농업인과 지역주민, 사회복지 법인 등의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된 농촌 활성화 방안을 통한 농촌자원의 유지·보전, 고용 창출 등 효과 파악
- 동일본 지진피해지의 지역자원,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그를 위한 외부와의 협동·연계를 위한 과제 정리

3. 외국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의 적용실태 등에 관한 분석

- EU, 한국 등 외국 지리적 표시제도를 구축 중인 국가의 제도, 운용실태 등 조사 분석
- 일본의 지역 브랜드 추진현황 조사 제도 도입에 따른 과제 정리
 -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의 지역 브랜드화 추진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지리적 표시의 보호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제 정리
- 지리적 표시보호제도 운영관련 심사기준 등에 대한 과제 요건의 정리
 - 외국 및 일본의 실태분석을 통해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의 운영에 관한 심사 기준 등에 대해 과제 및 요건을 정리

□ 에너지 관련 정책 연구

1. 농업분야에서 지구온난화대책의 영향평가

- 배출량거래 등 국내외의 농업분야의 지구온난화대책이 농가경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일본에서의 바이오 연료생산의 지속 가능성 평가 기법의 개발 및 평가

2.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모색

- 지진 피해지역에서 바이오매스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지역 내 순환 시스템, 에너지 자립의 가능성 평가 기법 등을 연구

□ 기타

1. 세계의 식료 수급의 증장기적인 전망에 관한 연구

2. 세계의 주요국·지역의 농업 무역을 둘러싼 환경 정책 등에 관한 연구

3. 소비자 요구의 변화에 대응한 식품공급 체인의 개편에 관한 연구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2월 20~24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

□ “가정 중도매인만 납품 받아라” 농업 하나로마트 계통거래 논란

- 농협 하나로마트, 올해 계통거래 확대 추진하면서 저조한 계통이용을 높이겠다는 방침으로 도매시장을 통해 공급되는 농산물은 농협공판장의 특정 중도매인과 거래토록 하는 업무 지시 내려져 논란 증폭. 인위적으로 납품처를 조장할 경우 도매시장 유통혼란, 산지 농협의 출하처 협소 및 출하경쟁력 저하, 거래 경쟁 약화로 가격 형성에도 악영향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2.2.20).

□ 공공 얼어붙은 ‘농심’

- 2월 들어 계속된 한파와 고유가의 영향으로 농산물값 오르고 있지만 물가 인상 여력이 악화되면서 농산물 소비 위축이 심해질 것. 정부, 17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요 품목에 대한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모니터링해 수매·비축, 필요시 수입 등을 통해 수급 대책 마련” 한다지만 주로 물가 인상을 억제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 데는 한계

자료: 농민신문(2012.2.22).

□ 정부-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지원방식 합의

- 농협중앙회 20일 이사회, 21일 대의원회를 통해 정부 출자자금 지원과 관련해 정부 제안 ‘현물출자 1조(금융지주회사 지원)+이자보전 4조’ 수용(당초 현물출자 2조원+이자보전 3조원). 이번 합의로 정부-현물출자 부담 1조원 줄고 농협중앙회-의결권 없는 우선 배당주를 받게 되면서 정부의 간섭 축소, 정부에 대한 배당금 부담도 감소. 그러나 현물출자 1조원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유동성이 높은 주식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높은 출자주식 지원 관련 합의는 미지수. 한편 정치권·노조 “개혁실패 우려...원안 이행” 반발

자료: 한국농어민신문(2012.2.23).

□ 덩덤해진 ‘수입농산물 구매’

- 대형마트매장, 중국·미국산 신선식품 국산과 함께 진열·판매 일상화, 최근 이어진 경기침체와 이상기후 등 국내 농산물 수급 불안정 상황 장기화로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경계 무너진 상황. 이러한 소비자 인식 변화는 대형마트의 구매 패턴까지 변화시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한 상황에서 국내 생산농가들은 가격뿐 아니라 품질과 안전성, 상품화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수입농산물과 경쟁

자료: 농민신문(2012.2.22).

□ 2030세대에 농지 우선지원

- 농식품부, 22일 농업 경영에 필요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 농업인을 선정하여 농지 2,500ha를 우선 지원. 농지 소유면적 3ha 이상이면 제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첫째 1ha를 신청하면 그 후 4년 동안 4ha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 가능. 지원방식은 농지를 5~10년 동안 장기 임대·농지매입자금을 연리 2%, 30년 상환조건의 저리융자. 영농을 희망하는 지역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

자료: 농민신문(2012.2.24).

□ 쌀 변동직불금 산출기준...1ha당 61가마→63가마

- 농식품부, 최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쌀 변동직불금 산출 기준의 하나인 1ha당 쌀 생산량이 61가마→63가마로 상향 조정. 개정안을 2010년산 쌀 변동직불금(가마당 1만 5,588원)에 적용하면 1ha당 직불금은 3만원 가량 증가. 2011년산은 고정직불금을 더한 산지쌀값이 목표가격을 초과해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음. 산출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전체 변동직불금 규모가 181~33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

자료: 농민신문(2012.2.24).

연구 지원 정보

2012 농림수산물분야 재정지원 방향

※ 본 자료는 2월 13일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2 나라살림 예산개요」의 내용 중 농림·수산·식품분야 부분을 정리한 것임.

□ 농림수산물분야 재정 지원방향

- 2012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18.1조원 수준이며, 2011년 17.6조원 대비 2.8% 증가한 수준임.
-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Golden Seed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는 등 중자산업을 육성하고, 농식품 R&D 투자 확대
- (FTA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농축어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12년에는 한-EU FTA 발효(2011.7월), 한-미 FTA 비준(2011.11월)을 계기로 농축어업의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중점 지원
-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생산자와의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함. 또한, 사이버거래소를 활용한 B2B 거래 등의 직거래를 확대하여 유통구조 개선 적극 지원
-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 지원) 식품산업이 농어업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개척 및 식품외식업에 대한 융자 지원 확대
- (농어업 보조금 지원 내실화) 농어가의 자기책임성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별 경영체에 대한 투입재 및 시설 보조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융자(이차보전)로 전환함. 아울러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농림사업체계 단순화

<농업 농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 억 원, %

구 분	2011년(a)	2012년(b)	증감률(b/a)
합 계	176,354	181,322	2.8
-농업 농촌	139,988	142,455	1.8
-수산 어촌	13,052	13,543	3.8
-임업 산촌	16,953	18,443	8.8
-식품업	6,361	6,881	8.2

□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 (농업 농촌) 2012년 농업 농촌부문의 예산은 13조 9,988억 원이며, 2011년 14조 2,455억원 대비 1.8% 증가한 수준임.
- 중자개발 R&D 투자 확대 등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고 FTA를 계기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중점 지원하며, 농수산물 가격안정·유통개선과 가축방역·재해대비 등 농림수산자원의 위험관리 강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

<농업 농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농식품부, 농진청>

단위 : 억 원, %

구 분	2011년(a)	2012년(b)	증감률(b/a)
합 계	139,988	142,455	1.8
-농식품 R&D	8,625	9,089	5.4
-중자산업 육성	834	925	10.9
-선도농가(강소농)경영 육성	-	115	순 증
-피해보전직불금	265	630	137.7
-발농업직불금	-	624	순 증
-수리시설확충	6,130	8,300	35.4
-시설현대화(축산 원예 과수 양식)	2,450	4,109	67.7
-농산물 비축지원	4,740	5,592	18.0
-산지유통종합자금(계약재배)	900	1,520	68.9
국가곡물조달시스템	200	422	111.0
-농협사업구조개편	-	1,500	순 증

- (임업 산촌) 2012년 임업 산촌부문의 예산은 18,443억 원 수준이며, 2011년 16,953억원 대비 8.8% 증가한 수준임.
- 선진 녹색국가 기반마련을 위해 산림자원의 확충과 보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며, 산림휴양인프라의 조성 등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

<임업 산촌 부문 주요 변동내역: 산림청>

단위 : 억 원, %

구 분	2011년(a)	2012년(b)	증감률(b/a)
합 계	16,953	18,443	8.8
-정책 숲가꾸기	2,451	2,473	0.9
- 조림	661	720	8.8
- 임도시설	1,141	1,198	5.0
- 사방사업	1,790	2,337	30.6
-산불방지대책	495	572	15.6

○ (식품업 부문) 2012년 식품업 부문 예산은 6,881억 원이며, 2011년 6,361억원 대비 8.2% 증가한 수준임.

-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수출농어업 육성을 위한 수출기반 확충 및 시장개척을 중점 지원

<식품업 부문 주요변동내역>

단위 : 억 원, %

구 분	2011년(a)	2012년(b)	증감률(b/a)
합 계	6,361	6,881	8.2
-농식품유통교육지원	-	20	순증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40	41	1.3
-농식품해외시장개척지원	298	314	5.4
-우수외식업지구육성	-	12	순증
-농식품안전사고및긴급대응	7	16	128.6
-식품외식종합자금	700	1,600	128.6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